

auribrief.

No. 58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서수정 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조시은 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2007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과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이라는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까지 수행되는 연구이다. 특히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은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건축은 2011년 중앙정부 예산 중 4조 7,370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기획력의 부재, 전문가 참여 미흡, 관료적인 행정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행정 인력 중 전문인력 보유의 한계,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를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합의형 성형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행정체계와 협력 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안을 검토하였고 행정적인 측면과 법적 검토를 병행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국내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통합적인 공공건축 조성체계 구축 필요성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과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15부 2처 18청)와 인구규모별로 선정한 16개 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조성과정과 담당 행정조직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공공건축 관련 총 예산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50% 이상이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축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공공건축조성사업은 각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지만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TF팀도 해산되어 조성과정 전체에 대한 이력과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가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행정적인 조달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획 및 설계과정의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업무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수급관리대상에 대해 각 청사의 규모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관리와 심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대한 기획업무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있는 중앙부처의 경우도 대부분이 운영지원과에 소수의 관리 인력을 두고 있을 뿐이며, 전문인력도 1~2인에 불과하여 공공건축 조성과정 자체를 물품 조달 업무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공공건축 전담 인력에 대한

표1 도시 규모에 따른 공공건축 업무 인력규모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	건축·토목직	총 담당 인원	비율(%)	사업 수	전문직 1인당 사업 수
대도시	16.3	19.3	84.5	21	1.3
중도시	4	8.8	45.5	11	2.8
소도시	2.1	7.3	28.8	3.1	1.5
합 계	5.3	10.0	53.4	6.8	1.7

표2 16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공건축 관련 인력규모

구분	인구	지방정부	관련부서			담당인원	
			과단위 이상 보유	팀·계단위 보유	부서명	건축 또는 토목직	전체
대도시	1000만	서울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40	40
	110만	수원	○		개발사업국 시설공사과	6	14
	100만	창원		○	주택정책과 공공건축 담당	3	4
중도시	90만	고양	○		푸른도시사업부 공사과	3	15
	80만	용인		○	회계과 공공청사팀	3	4
	60만	청주		○	공공디자인과 공공건축계	4	5
	60만	안양	○		시설공사과	5	15
	50만	김해		○	건축과 공공건축계	5	5
소도시	40만	구미	○		회계과	3	8
	30만	원주		○	회계과 공공시설계	2	4
	27만	아산	○		개발사업단 시설조성과	7	20
	16만	서산		○	건축과 건축행정 담당	1	6
	13만	정읍		○	회계과 청사관리팀	2	6
	10만	나주		○	회계과 청사관리팀	1	5
	8만	속초	○		회계과	1	4
	5만	태백		○	회계과 재산관리팀	0	6

* 인력파악이 불가능한 4개 소도시와, 인력배치가 유동적인 안산시 도시공사는 제외함

조사결과는 표 1, 2와 같으며 조사대상 지자체 16개 중 7개 지자체가 과 단위 이상 팀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일수록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는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2와 같

이 지자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내 공공건축 조성실태 및 행정운영 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도출되었다. 첫째, 기획업무는 공공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비용 감소와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자들이 인식

그림1 일반적인 공공건축 수급과정**그림2**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지자체 유형별 특성

분류		정의
유형 1	대·중도시 *단, 원주시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소도시 중 유일하게 유형1에 포함	<p>실과부서에서 기획 및 계획업무를 수행한 후, 공공건축 담당부서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형으로, 기획구상 단계 후의 유지·관리는 실과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수행</p>
유형 2	중·소도시	<p>기획 및 계획업무부터 시공에 이르는 업무까지를 공공건축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유형으로, 유지·관리는 실과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수행</p>
유형 3	중·소도시	<p>유지·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실과부서에서 담당하여, 기술 부서에서 자문 형태로 업무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 역시 실과부서에서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수행</p>
유형 4	대도시	<p>기획은 실과부서에서 수행하며, 계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CM의 형태로 공공건축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는 유형</p>

하지 못하고 있어 기획업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는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이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빈번한 설계변경을 수반하거나 예산증액을 초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성과물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부재와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부 중앙부처나 중소도시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건축설계사무소나 타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기획업무나 설계·발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의 관리·지원대상과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전반적인 품격 향상 도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공공청

사 위주의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시시설, 교육시설, 우체국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제외되고 있으며, 조달 청은 100억 이상의 설계 및 시공관련 계약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조성과정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축 조성과정에서 기획업무 내실화와 전문성을 담

보한 디자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행정조직과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파악을 위해 중앙부처(45명) 및 지방자치단체(324명) 공공 건축 조성업무 관계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공공건축 관련 업무는 자신의 업무비중 중 30% 미만에 그친다고 응답(62.6%)하고 있어 공공건축 이외의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상대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및 집중도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행정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건축지원센터의 필요정도는 100점 만점 중 71.2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후의 전문가 지원요청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 64점(100점 만점 환산결과)으로 나타나 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건축 관계자 80.8%가 공공건축 사업 최종성과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획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절반이 넘는 수(55%)

가 기획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는 공공건축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업필요성 판단, 예산계획,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견수렴, 디자인방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기획업무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수행 상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기획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 방안에 대해서는 70.8%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외부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디자인 방안은 단순 행정업무라기 보다는 전문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1.3%가 공공 건축 조성과정에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 전문가 참여에 의한 기획 업무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4.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용사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전담조직을 두고 전문가 주도로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의 주요기능 및 역할, 지원업무, 조직체계 등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3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용사례

구분	영국 CABE	프랑스 MIQCP	미국 PBS	핀란드 국유재산관리소
설립위치	총리산하 독립적 정부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	독립적 정부기관 (interministerial body)	연방정부 조달청 국가 서비스국 소속	재정부 소속
개요	• 공공건축물 및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 자문 제공	• 공공건축물 발주과정 및 절차개선 • 설계과정 자문	• 공공건축물 조성과정 지원 • 공공시설 임대 및 유지관리	• 국가 소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임대
조직유형	• 외부자문형	• 외부자문형	• 중앙부처 내부 자문 · 사업 관리 복합형	•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 사업관리 복합형
지원대상	• 주거 • 공공건축물 • 공원 및 녹지공간 등	• 중앙 및 지방정부 발주 공공건축물 • 사회 기반시설 • 공공공간	• 청사 • 통관항 지역 • 연구소 및 특별시설 • 역사적 건축자산	• 부처 및 특별자산 • 청사 • 국방 및 안보시설 • 개발부지
지원 내용	기획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타당성 검토 • 조달계약 업무지원 등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의 정치 · 문화 · 경제적 가치 분석 • 기획안 검토 등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현황 분석 • 지역개발 지침서 개발 • 사업타당성 검토 등
	설계	• 설계자 선정과정 지원 • 디자인리뷰 운영	• Jury제도 운영	• Design Excellence 제도 운영
	시공	–	• 문제 발생시 중개	• Construction Excellence 제도 운영
	유지관리	–	• 시설이양	• 건물운영, 보증 및 임대 서비스 • 시설 처분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체계를 위한 지원	• 지침서 개발 • 우수 사례집 발간 • 행정가 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규제, 지침 개발 및 배포 • 효율적 설계공모 경기방식 연구 등	• 규제, 지침 검토 및 교육 • 행정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TWN워크숍 운영
공공건축가 운영	• Enablers, 디자인리뷰 패널 및 지역대표 약 400인	• 민간 건축 컨설턴트 관리 · 운영	• 국가건축가 임명 • 전문가 평가단 운영	• 조직 구성원 다수가 경력직 공무원 또는 부동산업 전문인
필요 운영 인력	• 설립초기 행정인력 5인, Enablers 약 10인 • 2010년 조사 CABE 총 행정인력 125인	• 조직 설립 초기 총 12인, 현재 조직과 유사	• 본부 및 지역사무국 총 7,005인 근무	• 2009년 조사 본부 및 지역사무국 총 281인 근무
총 운영비용	• 약 2천9백만 파운드 (한화 약 320억원)	• 약 30만 유로 (한화 약 4억 7천만원)	• 약 9천1백만 달러 (한화 약 1조원)	• 약 3억7천만 유로 (한화 약 5천8백억원)

5.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운영실태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공공건축 지원센터 조직구성방안은 범부처형, 중앙부처 내부설치형, 공공기관 설립형의 3가지 유형으로 제안될 수 있다.(표 4)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가져야 할 원칙인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조직효율성, 민관협력 용이성, 입법

추진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범부처형의 독립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표 5)

이러한 검토결과를 통해 제시된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 구성안은 기존 행정조직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공공건축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각 중앙부처 담당부

표4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 구성 유형

대안 특징	범부처형	중앙부처 내부형	공공기관형
	국무총리실 산하	기존 부처내부 산하 조직	출연기관 설립
설립 위치			
장점	특정부처 영향을 받지 않고 관련부처 협의 조정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관련 실무적 지원 및 정책 요구 원활하게 추진 기존 공공건축 관련 인력의 역량 활용 	독립성이 보장, 민관협력 용이성 확보
단점	재정 및 인력확보를 위한 법제정 이후 설립 가능	단일부처에 소속되어 있어 해당 기관 산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적 조정	법적 통제력 확보 미흡

표5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형태 대안별 비교

비교항목	대안	범부처형	중앙부처 내부형	공공기관형
법적 통제력	보통	강함	미약	
범부처성	강함	미약	보통	
독립성	강함	미약	강함	
전문성	강함	보통	강함	
조직효율성	강함	보통	보통	
민관협력 용이성	보통	미약	강함	
입법추진의 용이성	강함	강함	미약	

서와 지자체 담당부서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공공부분의 기획업무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단체와 학·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 조직의 협조와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그림 3)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역할 및 업무는 설문조사결과와 국내 공공건축조성 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관련 디자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공공건축가 육성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으로 설정하였다.(표 6)

또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 조성과정 전체를 일관된 개념과 시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업무의 주요내용은 디자인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합리적인 디자인을 결정해 가는 디자인품질평가(Design Quality Indicate)를 수행하는 업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디자인 검토는 기획단계,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 이전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

기획단계에서는 사업 필요성과 가능성, 건축타당성과 발주방식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기획단계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 이전단계에서는 초기 디자인 기획의도의 부합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디자인검토회의는 프로젝트마다 소수의 전담 검토위원이 참여하여 기획단계부터 시공이전단계까지 전담한다는 점에서 일회적이고 불특정 위원이 참

그림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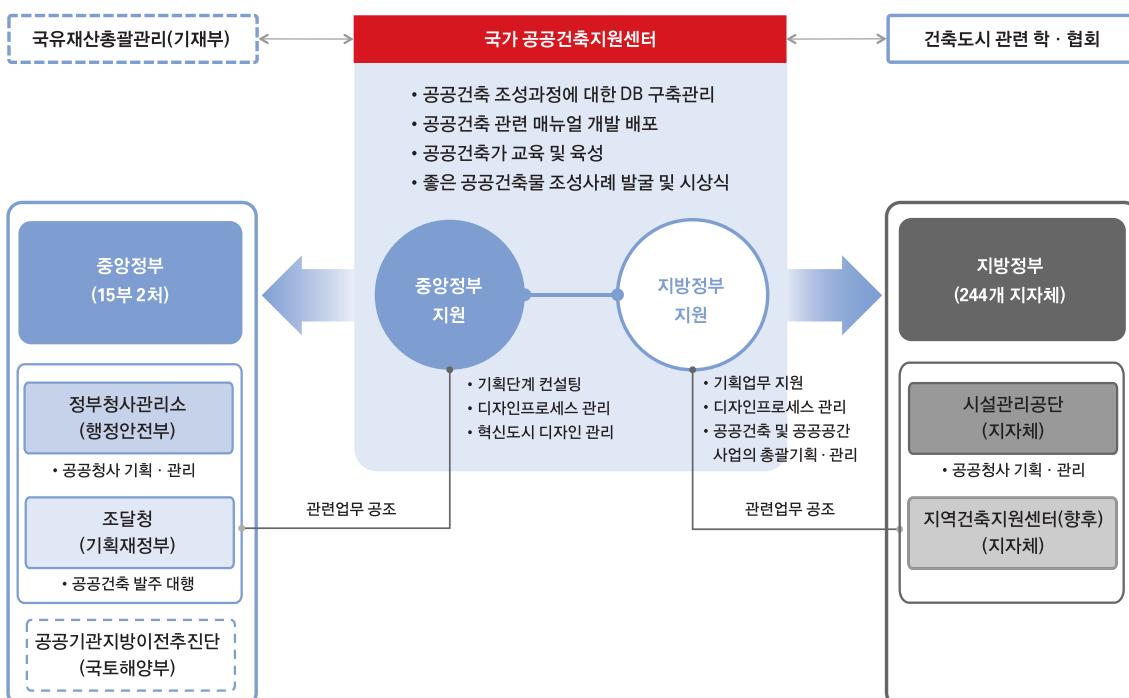


표6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안)

구분	주요 업무	역할	
		공공건축가	관련부서 행정담당자
공공건축 사업의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서술 • 공공건축사업 목표의 우선순위 정립 • 사업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벤치마킹 사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및 참조사례 수집 등을 통해 참여주체들간 원활한 논의를 위한 준비 • 추진사업의 디자인 가치 및 방향 제시 • 사업목표 및 우선순위 자문 ·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목표의 우선순위 선정
사업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계획 수립(부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리스크 관리, 운영관리 비용 등) •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예산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계획 수립 • 사업추진일정 수립
이해 관계자들간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참여 이해관계자 및 역할 명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업무의 수행방안 및 의사 결정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간 논의 과정에서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설명 • 이해관계자들간 역할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필요 참여주체 파악 및 소집 • 의사결정체계 확립
건축설계 발주방식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추진일정, 예산 등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턴키, 현상설계경기, 가격경쟁입찰(PO) 등 적정한 발주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발주방식 결정 	-

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자문위원회나 법정 심의기구와 다르다.

전문행정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할 경우 설계경기를 대행하거나 공공건축 관련 용역을 대행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 공공건축 조성 과정 사후평가 및 DB 구축, 매뉴얼 개발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존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행해지던 공공건축 관련 발주, 관리 등의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차원의 검토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 조직의 근거, 운영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적 근거와 조직의 틀, 조직의 역할과 주요업무를 행정적, 법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의 지원센터 역할과 범위



6.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초기에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민·관 협력형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외각기구인 범부처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지자체

내에서 일상화 되면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원센터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건축 관

그림4 중·대도시 내 지역건축지원센터 설립 이후의 공공건축지원센터 네트워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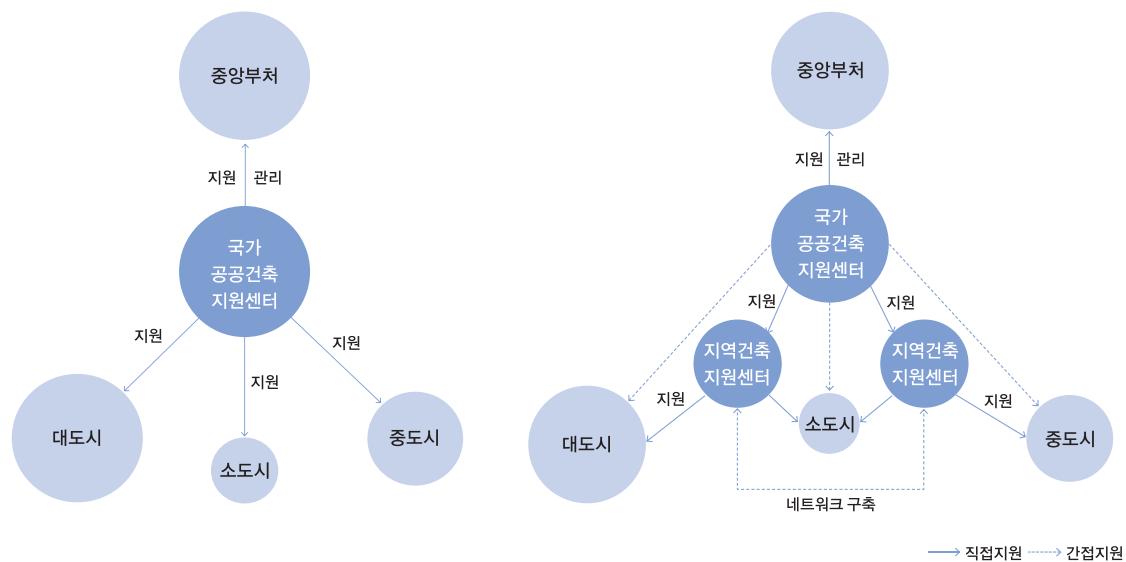


표8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형태 및 기능의 전환

구분	단기 (기반구축 단계)	중기 (센터 정착단계)	장기 (지역센터 확대단계)
조직형태	범부처형		공공기관형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 이상 중앙정부 발주 사업 및 40억 이상 지자체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 • 40억 미만 지자체 사업에 공공건축가 파견 * 단,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지원범위를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에서 상징적이며 중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 다수의 지역 협의가 필요한 사업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공공건축가 파견 • 효율적인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확립 • 지자체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지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조성과정 사후 평가 및 통합적 DB 관리 • 유휴시설 활용 및 제고를 위한 업무 • 선도적 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각종 포상제도 운영 및 홍보사업 수행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공공건축가 파견 • 지역별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한 시범적 사업 운영

표9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주요업무



련 DB구축을 기반으로 국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4)

이러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은 단기적으로는 기반구축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센터 정착단계, 지역센터 확대 단계로 발전가능하다. 설립 초기에는 공공건축가 파견 및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지원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운영절차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가에 대한 교육과 업무매뉴얼 개발·배포 등에 주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8)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역할과 업무 중의 하나인 공공건축가 육성과 지자체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관리는 실제 행정조직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필요로 하며, 시범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2차년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모델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성과를 종합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와 연계하는 방안과 공공건축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uribrief**.

서수정 9645, sjseo@auri.re.kr

김영현 9619, yhkim@auri.re.kr

조시은 secho@auri.re.kr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hslyu@kipa.re.kr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learning@kipa.re.kr